
정책참고자료

2019-3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행정안전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수 80% 감소	_____	4
	-행안부, 2018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결과 발표-		
2	국민권익위원회		
	물놀이시설 안전·수질 관리 엄격해진다	_____	11
	- 안전요원 배치기준 명확화, 수질검사 항목 확대 등 '물놀이시설 안전 및 수질관리 강화 방안' 마련 -		
3	중소벤처기업부		
	수요자 맞춤형 판로개척·기술지원으로 소공인 혁신성장 견인	_____	15
	- 2019년 소공인 판로개척 및 기술지원 사업 공고-		
4	교육부		
	교육부, 2019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_____	18
	- 도우미 현장실습형 교육 의무화 및 교육시간 확대로 서비스 질 개선 -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과학자가 성장하는 '사람'중심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한다	_____	23
	- 28일 과기정통부 제1차관 성균관대 대학원생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6	문화체육관광부		
	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여행 가세요	_____	26
	- 2. 12.~3. 8. 신청 모집,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 대상 -		
7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방역, 정부·지자체·농업인의 협력이 중요한 때	_____	30
	- 고강도 방역 태세 유지, 지자체 간부진 현장 점검 강화 등 -		
8	환경부		
	세계 물산업 중심으로 도약...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계획 발표	_____	32

9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맞벌이 가구를 위한 거점형 공공 어린이집 확대 _____ 36
- 자치단체 대상 공모 실시, 2019년 총 10개소 건립 추진 -

10 여성가족부

전국 87개 여성친화도시 _____
“마을 단위 성평등 정책”추진한다. 44
- '2018년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시상식 및 협약식' 개최 -

11 국토교통부

국토부, 지자체별 저상버스 보급 계획..375.5 억 투입 _____ 51
- 전국 17개 시도 통보..전년 대비(802대) 9.5% 확대된 877대 보급 -

12 해양수산부

안전관리 취약선박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한다 _____ 54
- 대형사고 예방에 해사안전 지도·감독 역량 집중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수 80% 감소

- 행안부, 2018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결과 발표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시행 효과 및 주요 개선사례>

▶ (시행효과) 교통사고 사망자수 80% 감소(30명→6명), 교통사고 발생건수 30.2% 감소(1,479건→1,031건)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로에서 일정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점을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 사고 요인 분석과 현장조사를 통해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저비용 고효율 교통안전개선사업임('88년부터 추진)

▶ (주요 개선사례)

- 부산 서구 동대신사거리 : 신호등 추가,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로 교통사고 90% 감소(10건→1건)

- 울산 남구 시외버스터미널 앞 사거리 : 전방신호기 설치, 교차로 주변 수목 정비로 교통사고 68% 감소(28건→9건)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교통사고 잦은 곳***을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80%, 교통사고 건수는 30.3% 감소**했다.

* 특별·광역시외의 경우, 한 해 교통사고가 5건 이상, 그 외 지역에서는 3건 이상 발생한 지점

□ 이는 행정안전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016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완료된 154개소에 대해 개선 전 3년 평균 사고 데이터와 개선 후 1년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이다.

○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사업 시행 전인 2013년~2015년에는 연평균 사망자수가 30명이었으나, 사업 시행 후인 2017년에는 6명으로 80% 감소했다.

○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시행 전 1,479건에서 시행 후 1,031건으로 30.3% 줄어 신호기 증설, 무단횡단 방지펜스 설치 등 간단한 교통안전시설 개선만으로도 효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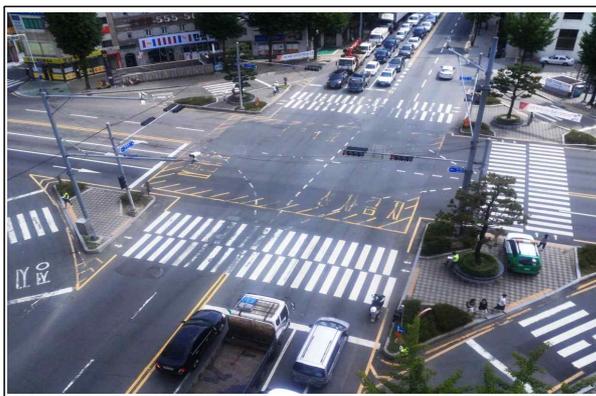
(사망자 감소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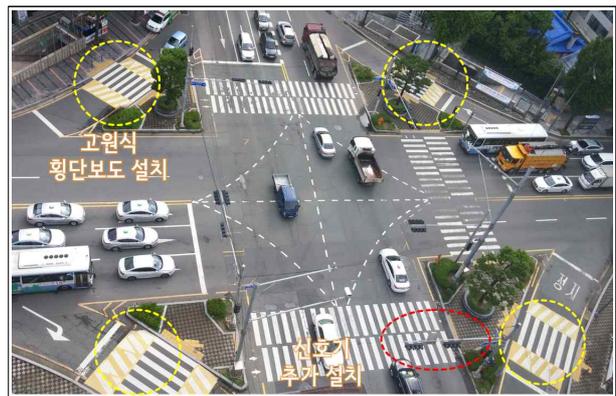
(교통사고 감소 효과)

□ 주요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사거리는 신호등 위치가 멀어 운전자들이 신호를 잘 인식할 수 없고, 횡단보도 앞에 과속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개선 전 연간 평균 1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 운전자들이 신호등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추가 설치하고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개선 사업 후 교통사고가 1건으로 90% 감소하였다.



(개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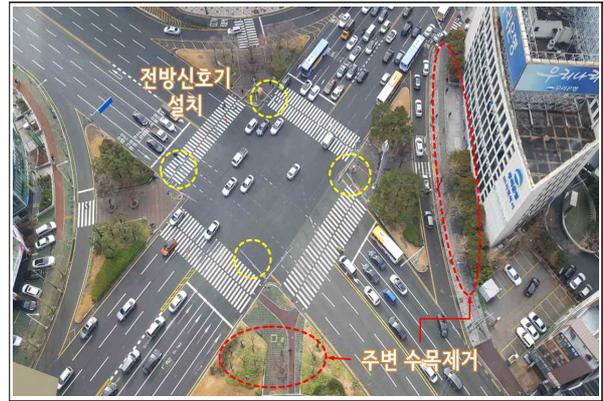
(개선 후)

- 울산광역시 남구 시외버스터미널 앞 사거리는 주변에 대형마트, 아울렛 등 상가가 밀집하여 유동인구와 차량 교통량이 많았고, 가로수로 인해 운전자 시야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개선 사업 전에는 연간 평균 2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 전방신호기를 설치하고 교차로 주변 수목을 정비한 결과, 9건으로 68% 감소하였다.



(개선 전)



(개선 후)

-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988년부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지난해까지 전국 10,888개소를 개선하였으며, 올해에도 266개소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대해 사고 원인 분석에 따른 맞춤형 개선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효과가 검증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현재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 목표('17년 4,185명 → '22년 2,000명 수준)

참고 1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분석 현황

분석 년도	지점수	교통사고 발생건수(건)			교통사고 인명피해(명)					
					사망자			부상자		
		개선전	개선후	효과(%)	개선전	개선후	효과(%)	개선전	개선후	효과(%)
2009	441	2,553	1,577	38.2	45	22	51.1	4,343	2,620	39.7
2010	587	3,872	2,636	31.9	87	41	52.9	6,571	4,031	38.7
2011	495	3,777	2,566	32.1	74	41	44.6	6,417	4,016	37.4
2012	455	3,589	2,340	34.8	65	32	50.8	5,780	3,499	39.5
2013	421	3,113	1,963	36.9	54	34	37.0	5,113	2,998	41.4
2014	294	2,871	1,721	40.1	43	26	39.5	4,619	2,617	43.3
2015	325	3,579	2,020	43.6	74	29	60.6	5,833	2,973	49.0
2016	201	2,116	1,338	36.8	52	21	59.3	3,437	2,135	37.9
2017	136	1,491	1,043	30.1	35	12	66.0	2,410	1,620	32.8
2018	154	1,479	1,031	30.3	30	6	80.0	2,452	1,616	34.1

※ 변화하는 교통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선 전 3년 평균 데이터와 개선 후 1년 데이터 비교
(개선전) 2013~2015년 연평균 / (개선후) 2017년 교통사고 발생·피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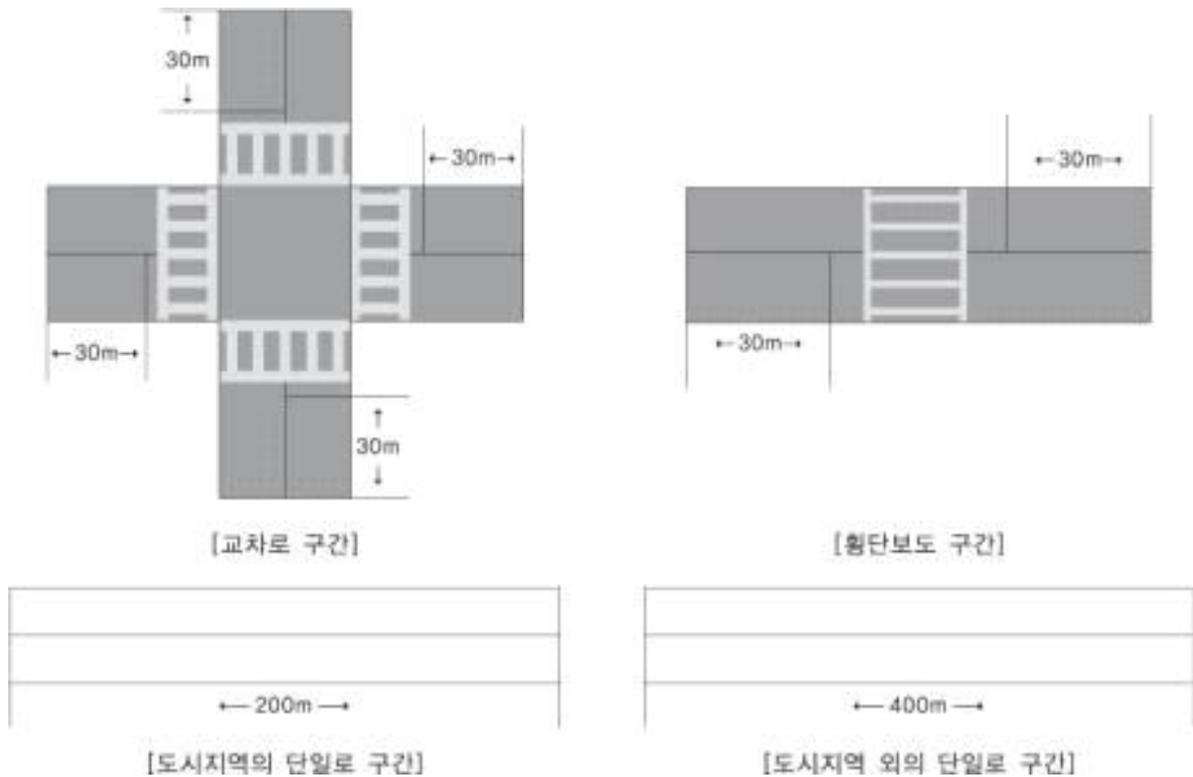
참고 2

교통사고 잦은 곳이란?

- 『교통사고 잦은 곳』은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아래 표와 같이 일정한 공간에서 1년간 다음 기준이상으로 발생한 지점을 말함.

구 분		선정기준	
지 역	특별·광역시	5건 이상	
	일반 시·도	3건 이상	
도로 형태	교차로 및 횡단보도		
	기타, 단일로	시 가 지	반경 100m이내
		기타, 고속도로	반경 200m이내
대 상 사 고		인적피해사고	

〈표〉교통사고 잦은 곳 선정 기준



〈그림〉교통사고 잦은 곳의 공간적 범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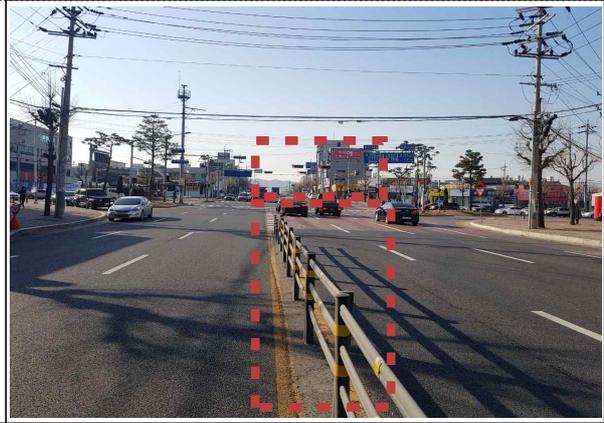
참고 3

기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례

충청북도 충주시 법원사거리(전방신호기, 과속방지 포장, 중앙분리대 설치 등)

개선 전(사고 16건, 부상 27명)

개선 후(사고 9건, 부상 12명)



전라북도 익산시 오릉교차로(회전교차로 설치 등)

개선 전(사고 6건, 부상 11명)

개선 후(사고 0건, 부상 0명)



경상북도 구미시 에덴아파트 앞 교차로(전방 신호 이설, 중앙분리대 설치 등)

개선 전(사고 4건, 부상 4명)

개선 후(사고 1건, 부상 1명)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농협주유소 앞 교차로(교차로 구조 변경 등)

개선 전(사고 2건, 부상 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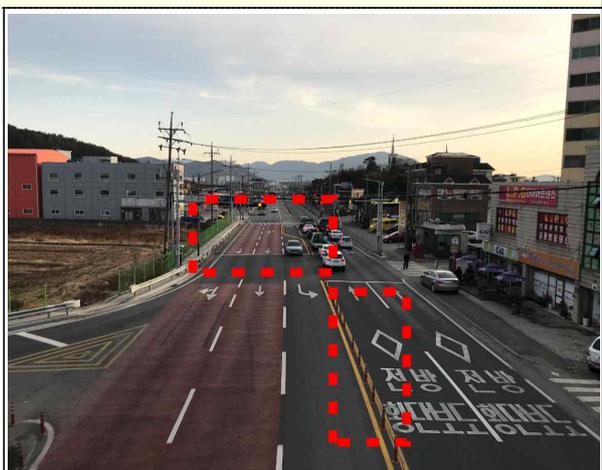
개선 후(사고 1건, 부상 2명)



경상남도 창원시 해강아파트 앞 교차로(과속방지포장, 시선유도봉 설치 등)

개선 전(사고 3건, 사망 1명, 부상 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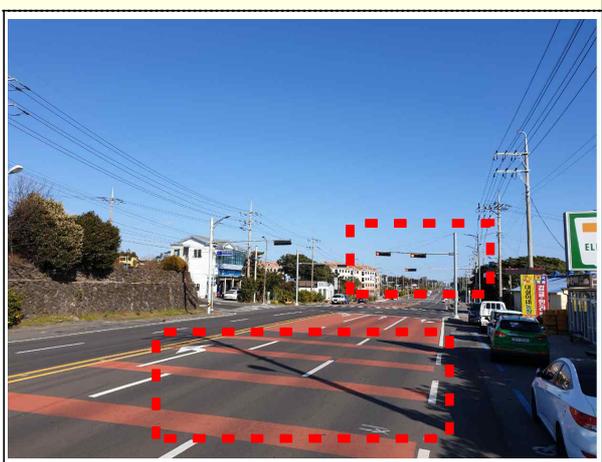
개선 후(사고 1건, 사망 0명, 부상 1명)



제주도 서귀포시 중앙차병원 앞 사거리(신호기 이설, 노면 과속방지포장 등)

개선 전(사고 2건, 부상 4명)

개선 후(사고 0건, 부상 0명)



물놀이시설 안전·수질 관리 엄격해진다

- 안전요원 배치기준 명확화, 수질검사 항목 확대 등 ‘물놀이시설 안전 및 수질관리 강화 방안’ 마련 -

- 수영장 안전요원의 배치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영장 및 물놀이형 유원시설(워터파크)의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하는 등 물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과 수질관리가 강화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물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물놀이시설 안전 및 수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생활주변 ‘물놀이시설’ 관련 민원 1,421건을 분석한 결과를 2018년 7월에 발표했다. 민원 절반 이상(52.1%)이 ‘안전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안전인력 운영, 수질 및 위생관리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물놀이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물놀이시설 안전 및 수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2017년 12월 현재 체육시설로 관리되는 수영장은 1,460개소, 워터

파크는 157개소이며, 이용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물놀이시설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하지만 수영장의 경우 감시탑에 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도록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근무위치나 근무형태가 불명확하여 안전요원이 감시탑을 벗어나거나 강습 중인 수영강사가 안전요원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최근 3년 6개월간(2015년 1월~2018년 6월)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 151건이 안전요원 미배치 신고나 배치기준 문의, 21건이 감시위치 이탈 등 의무소홀에 관한 민원
 - ▶ 안전요원이 감시탑에 없었고, 수영장 책임자가 수영장 전체가 아닌 양쪽 가장자리만 보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음(2016년9월, 국민신문고)
 - ▶ 수영지도자가 강습과 안전요원을 병행하면서 근무하고 있고, 무더운 날씨에 이용자가 늘면서 자유수영하는 노약자,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됨 (2016년8월, 국민신문고)

- 그리고 수영장 및 워터파크의 물속에 남아있는 결합잔류염소*는 수치가 높을 경우 눈·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미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수질검사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서 국내 일부 워터파크의 결합잔류염소를 표본 조사한 결과, 미국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합잔류염소는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음(출처-한국소비자원)

- 국내 워터파크 결합잔류염소 표본 조사결과 0.22~0.64mg/L로 미국세계보건기구 기준 0.2mg/L을 초과(호주 기준 1.0mg/L에는 적합, 2018년 8월, 한국소비자원)

- 또한 워터파크의 수질검사 주기가 수질검사 항목에 따라 1년 또는 1분기마다 1회로,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15일마다 1회)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적정 수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 이와 함께 수영장의 수질검사 항목은 8개이나, 게시 항목은 2개에 불과하여 비게시 항목 중 부적합한 결과가 발생해도 이용자들은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

※ 수질검사 항목(8) :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 대장균군, 비소, 수은, 알루미늄

※ 수질 게시항목(2) :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 최근 3년 6개월간(2015년 1월~2018년 6월)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 94건이 수질 불만 및 관리 강화 요구
 - ▶ OO 수영장에서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중인데, 학생들 중 몇몇의 손바닥 피부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고, 수영하고 나오면 머리와 코가 아프다고 하며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아이도 있으니 수질검사 요청 (2018년 5월, 국민신문고)
 - ▶ OO 워터파크에서 친구가족들과 물놀이를 오전부터 오후 5시경 까지 즐겼는데 그 날 밤 와이프랑 아이가(11세) 피부가 가렵고 두드러기가 나타나 병원 처방을 받았고, 친구 아이들도 피부염에 걸렸다고 함 (2017년 7월, 국민신문고)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수영장의 안전요원이 임의로 감시탑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안전요원 임무 수행 중에는 수영강습 등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에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 또 수영장 및 워터파크의 수질검사 항목에 결합잔류염소를 추가하고 적정기준을 설정하는 등 우리나라 물놀이시설의 실정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워터파크의 수질검사 주기는 소독제 농도나 미생물 등의 모니터링 빈도를 높여 적성 수질의 항시 유지를 통한 효과적인 수질관리가 가능하도록 물놀이형 수경시설 기준(15일마다 1회)을 고려하여 단축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수영장은 그 동안 게시항목에서 제외되었던 탁도, 과망간산 칼륨의 소비량, 대장균군, 비소, 수은, 알루미늄을 포함한 8가지 수질검사 항목 모두의 검사 결과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수영장 및 워터파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설물, 교통, 소방, 식품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안전 위해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요자 맞춤형 판로개척·기술지원으로 소공인 혁신성장 견인

- 2019년 소공인 판로개척 및 기술지원 사업 공고 -

□ 중소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과 제품·기술 가치 향상을 위해 2019년 120억 원을 지원한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

- 전시회 참가, 온라인몰 입점 등 판로개척과 제품·기술의 업그레이드나 개발이 필요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1차(155개사, '19.1.31~2.28)와 2차(140개사, '19.3.29~4.19)로 나누어 금년도 사업신청을 받는다.

□ 2019년 소공인 지원사업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소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 제품·기술가치 향상 지원은 발표평가(프리젠테이션)에 부담이 많은 업체상황을 고려하여 소공인이 자신의 작업장에서 과제를 설명하고,
 - 관련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참여기업의 기술, 제품 및 공정, 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여 과제수행 역량과 효과를 평가하고, 현장컨설팅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 둘째, 최근 다양화된 홍보수요를 반영하여 SNS, 블로그, 1인 미디어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항목을 신설하여 온라인 판로 지원을 강화한다.

○ 셋째, 판로개척 참여기업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9개 판로지원 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전시회 참가, 온라인몰 입점, 오프라인몰 입점, 뉴미디어 마케팅, 홍보영상·광고, 디자인 제작, 인증획득, 시장조사·컨설팅, 해외배송

- 특히, 정보부족으로 전시회 참가에 애로를 겪는 소공인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공모로 선정)을 별도로 운영하여 맞춤형전시회 추천부터 참가방법 및 부스운영 안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넷째,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등 6개 업종*을 포함하여 전체제조업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기타 운송장비, 담배,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소공인이 판로개척 확대와 제품·기술가치 향상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여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보다 자세한 사업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판로지원

- (지원 실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공인 312개사를 선정하여 전시회 참가, 온라인몰 입점, 홈쇼핑 광고 등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 (주요 성과) 판매촉진 지원을 통해 소공인 월평균 매출액 16.1% 증가, 상시근로자 수 14.3% 증가 ('18년 성과조사 결과)

우수 사례

- 업체정보 : 주식회사 쿠나이앤티(강준배 대표)
 - 강아지 샴푸, 탈취제, 향수 등 기능성 반려용품 제조·판매
- 사업내용 : 전시회 참가를 위한 홍보동영상 및 제품디자인 제작,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받아 국내외 판로활동 추진
 - 고양이용품 전시회(궁디팡팡 캣페스타) 및 미국 애완용품 전시회(SUPER ZOO) 등 국내외 전시회 참가
- 주요성과 : 전년대비 31% 증가한 매출액 21억('17년 16억), 수출액은 850% 증가한 57천\$ 달성('17년 6천\$)



□ 제품·기술가치 향상

- (지원 실적) 신기술 개발, 공정·제품디자인 개선, 공동애로 해소, 생산정보체계 구축 등을 통해 소공인 105개사 부가가치 향상 지원
- (주요 성과) 과제개발 지원을 통해 소공인 월평균 매출액 12.6% 증가, 상시근로자 수 15.5% 증가 ('18년 성과조사 결과)

우수 사례

- 업체정보 : 월드잉 주식회사(김성일 대표)
 - 손목운동기구(손목근력강화, 손목터널증후군 예방)인 자이로 제품의 제조 및 판매
- 사업내용 : 기존 수입품의 합성실로 된 작동끈 시동방식을 사용편의성을 위해 작동끈 없이 시동 가능한 제품개발 지원 (자이로토성, 노출된 회전자를 치면 시동)
- 주요성과 : 매출액은 '17년 7천만원에서 '18년 2억으로 3배 증가하고, 수출도 10백만\$ 실현, 특허 2건 출원, 국내외지재권 18건



교육부, 2019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 도우미 현장실습형 교육 의무화 및 교육시간 확대로 서비스 질 개선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과 '2019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1월 29일(화)에 공고한다.
- 장애대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속기 및 이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도우미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 올해부터 도우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장애대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장 실습형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학기별 교육시간을 100분에서 120분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장애체험교육(시각장애, 휠체어 등 체험), 장애인 복지시설 및 기관 방문 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의 불편함 이해 및 공감

- 올해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1~3급) 학생에게 우선 지원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증장애(4~6급) 학생 등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 (신청 방법)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신청하고, 대학은 수요를 종합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한다.

* 2019년 일반·전문 도우미 대학별 1학기 신청서 접수: 2019. 3. 4.(월) ~ 3.15.(금)

- 이 사업은 2004년 ‘대학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종합 대책’ 발표 이후 2005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 작년에는 지원을 신청한 102개 대학 전부를 지원하여 783명의 장애 대학생들이 도움을 받았고,
 - 장애대학생의 교내 수업 뿐 아니라 학습에 필요한 특강 및 취업 프로그램에 참여 및 석·박사과정의 장애대학원생에게도 도우미를 지원하고 있다.

- 아울러 교육부는 ‘2019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한 대학관계자의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2019. 1. 30.(수) 13:30,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최하여,**
 - 사업 취지 및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 전우홍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장애대학생이 대학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에 자신감을 키워 우리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라며,
 - “앞으로도 장애대학생의 학업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개요
 2.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 방법

□ 추진 목적

- (장애대학생)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을 통한 학습 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
- (대학·사회)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우수 인력 양성 및 장애인의 자아실현을 통한 사회통합 구현

□ 추진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및 제31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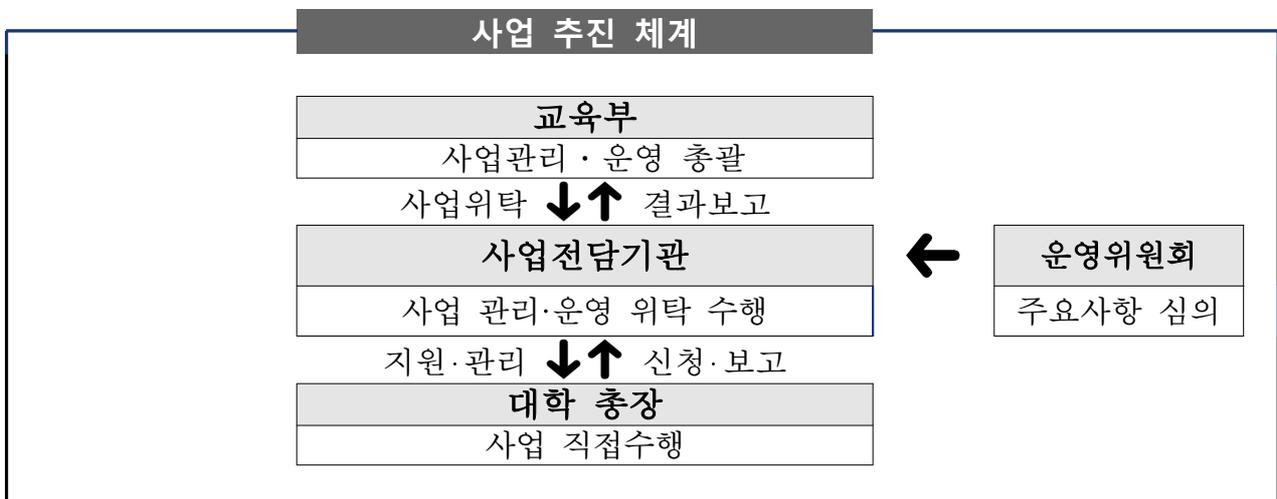
□ 내 용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내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도우미 지원

《 장애대학생 학습 도우미 유형 》

- (일반도우미)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지원
- (전문도우미)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에 의한 학습지원 및 의사소통지원
- (원격교육 전문도우미) 원격으로 실시간 강의내용 속기지원

□ 추진 체계



□ 지원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 「평생교육법」 제31조 및 제33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 설치된 대학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1~3급)** 학생 우선 지원***

*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 의하되,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19.7월부터 단계적 폐지) 관련법령에 따른 중증장애학생 우선지원

*** 단, 필요 시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경증(4~6급) 또는 기준 외 학생도 포함

□ 지원 내용

- (일반·전문) 일반(일반인) 및 전문 도우미* 지원

* ’19년도 예산, 수요를 고려하여 도우미 인원 산정

- (일반도우미) 대필 및 의사소통, 이동 및 편의 지원 등

- (전문도우미) 중증 대학생을 위한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

- (원격지원) 원격 지원 프로그램 및 전문도우미(속기사) 지원

- 청각장애 대학생이 강의실 등에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실시간으로 강의내용 원격 지원

※ ’19년도 예산, 수요를 고려하여 도우미 인원 산정

□ 추진기간

- 2019. 1. 1. ~ 2019. 12. 31.(1년간)

□ 예산액

(단위 : 백만원)

사업 전담기관	금액	비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776	▪ 일반(일반인) 및 전문 도우미
	540	▪ 원격교육 전문도우미
	161	▪ 사업관리운영
합계	2,477	

□ 일반·전문도우미

- 사업신청서 접수
 - 2018학년 겨울계절학기: 2019. 2. 8.(금)~2019. 2. 14.(목)
 - 1학기(여름계절학기 포함): 2019. 3. 4.(월)~2019. 3. 15.(금)
 - 2학기(겨울계절학기 미포함): 2019. 8. 26.(월)~2019. 9. 6.(금)
- 제출서류
 - (서식1) 사업신청서 1부
 - (서식2) 사업계획서 1부
 - (서식3) 지원대상 장애학생 현황 1부
 - (서식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식5)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사업 국고 전용통장 사본 1부
 - (서식6) 특별지원위원회 사전 심의 결과서 1부
- 제출방법: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제출
 ※ 일반(학생)도우미는 한국장학재단의 별도 안내에 따라 신청

□ 원격도우미

- 사업신청서 접수
 - 1학기: 2019. 2. 25.(금)~2019. 3. 6.(목)
 - 여름계절학기: 2019. 6. 3.(월)~2019. 6. 11.(화)
 - 2학기: 2019. 8. 19.(월)~2019. 8. 29.(금)
- 제출서류
 - (서식7) 원격교육지원 신청서(총괄표) 1부
 - (서식8) 원격교육지원 신청 시간표(학생별) 1부
- 제출방법: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제출

□ 관련 문의

도우미 구분	교육부		전담기관	
	담당부서	전화번호	기관 및 부서	전화번호
일반(일반인)·전문도우미	장애학생진로 평생교육팀	044-203-6312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02-3780-9923
원격교육 전문도우미		044-203-6772		02-3780-9922

※ 일반도우미(학생)은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 053-238-2480(담당자), 1599-2000(대표번호)으로 문의

청년과학자가 성장하는 ‘사람’ 중심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한다

- 28일 과기정통부 제1차관 성균관대 대학원생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문미옥 제1차관은 28일(월) 오후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내 N센터에 위치한 기초과학연구원(IBS) 연구단과 연구 혁신사례로 꼽히는 글로벌바이오메디컬엔지니어링(GBME)학과를 방문하였다.
 - 기초과학연구원 나노구조물리연구단(단장 이영희) 및 뇌과학이미징 연구단(단장 김성기)을 찾아 세계 수준의 기초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격려하였다.
 - 이어서 이공계 대학 혁신사례로 꼽히는 글로벌바이오메디컬엔지니어링(GBME)학과를 찾아 의료영상 및 기기, 생체재료, 뇌과학 분야 간 다학제적 융합연구를 교수와 학생이 개방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하며 연구하는 현장을 지켜보았다.
- 문미옥 제1차관은 연구 현장 방문 후 이공계대학원생의 학업과 진로에 있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람’ 중심의 대학연구 환경 조성 과 연구혁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가졌다.
 - 성균관대 이공계 대학원생 10여명이 참석하여 학생 입장에서 연구현

장에서 느꼈던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환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문미옥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들의 연구와 학업활동을 격려하
는 한편, “정부는 안정적 학생인건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 청년
과학자가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
라며, “앞으로 이공계 대학을 ‘사람’이 지속적으로 유입·성장할 수 있
는 거점이 되도록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 협업을 통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월 확정된 4차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
ICT인재성장 지원 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이공계 대학 연구혁신 및
신진연구자의 안정적 성장 거점 강화를 위한 ‘이공계 분야 연구중
심대학 육성’을 기획 중으로, 교육부 등과 협업을 통해 (가칭)이공계
분야 연구중심대학 육성방안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 **개요**

- (목적) 이공계 대학원생과의 현장소통을 통해 학업과 진로에 있어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 청년과학자 여건 강화 및 지원 확대,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 정부 정책방향 공유
- (일정) 1.28(월) 14:10 ~ 16:00
- (방문기관) 성균관대학교(수원캠퍼스)
 - ※ (선정이유) N센터 설립 등 이공계 연구환경 강화 및 국내외 우수교수 영입 등으로 경쟁력 강화 노력 중(서울소재 대학 중 취업률 1위, 중앙일보 대학평가 2위 등)

□ **현장방문 계획(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30~1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혁신사례 현장 방문 1) 글로벌바이오메디컬엔지니어링(GBME) 학과 연구공간 2) IBS 캠퍼스 연구단 - (나노구조물리, 뇌과학이미징, 2곳) 	교수, 학생이 자유롭게 연구하는 오픈 공간 (N센터 3층) ※ IBS 연구단 : 1층
15:10~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생 간담회 - 자유로운 환담 형태로 진행 	대학원생 10여명 (N센터 4층)

근로자 휴가비 지원받고 국내여행 가세요

- 2. 12.~3. 8. 신청 모집,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2월 12일(화)부터 3월 8일(금)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하여, 해당 근로자가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8천5백여 개의 기업에서 모집인원의 5배가 넘는 10만 명의 인원이 신청해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2만 명에서 4배로 증가한 8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고, 이용 기간은 11개월(‘19년 4월~’20년 2월)로 늘렸으며, 참여 기업의 제출 서류도 간소화하여 신청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3월 8일(금)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되며, 참여 기업 선정은 3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을 활용하여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 관련 체험 상품 등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 참여 신청 및 세부사항 안내: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 > 지원센터

** 전담 지원 콜센터: 1670-1330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참여 근로자의 87%가 직장 내 휴가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을 만큼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라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하여 기업 내 휴가 문화를 개선하고 국내여행을 촉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19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계획

2. 2019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포스터

□ 추진목적

-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쉼표가 있는 삶 마련**
*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2위(2,069시간, OECD 2017 고용동향)
-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기업 분위기 조성**
* 근로자 휴가사용 장애요인 1위는 직장 내 분위기(산업연구원/17.5)

□ 2019년 추진계획

- **(사업방식)** 기업-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 시 정부가 추가 지원
- **(여행경비 적립)** 근로자 1인당 총 40만 원
* 적립비율: 근로자 50%(20만 원), 기업 25%(10만 원), 정부 25%(10만 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근로자 8만 명
- **(선정기준)** 기업단위 전산 추첨
* 기업 규모별(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비율 할당하여 선정
- **(참여절차)** 참여신청(중소기업) → 참여근로자 확정(정부) → 분담금 적립(기업/근로자/정부) → 여행경비 적립금 포인트로 사용(근로자)
- **(참여기업 혜택)** 정부인증(가족친화기업, 여가친화기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참여증서 발급, 우수 참여기업 정부포상, 현판 수여, 사례집 발간 등 홍보
- **(신청방법)**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
- **(적립금 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국내여행 상품, 숙박시설(콘도, 호텔, 펜션 등), 체험 입장권(관광지, 테마파크, 휴양림, 지역축제 등), 교통(국내항공권, 기차, 렌터카)
- **(주요 추진일정)** 참여기업/근로자 모집('19.2~3월) → 적립금 조성('19.3월) → 적립금 사용('19.4월~ '20.2월)

□ 기대효과

- 지원규모 확대를 통한 기업 내 휴가 가는 분위기 사회적 확산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



'2019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기업/근로자를 모집합니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근로자 8만명**
(소상공인 포함)



사업방식

여행경비 적립

₩ 40만원 여행경비 = 20만원 근로자 + 10만원 기업 + 10만원 정부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적립금 조성 후, 정부 추가지원

여행적립금 사용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사용기간

2019. 4월 ~ 2020. 2월 (차년도 사업은 2020. 2월 공고 예정)

추진일정

2. 12(화) ~ 3. 8(금) 기업/근로자 참여신청

*참여신청 마감 후 향후 세부일정 홈페이지 공지예정

3월 중순 기업 담당자 대상 참여기업/근로자 확정 안내

3월 말

-참여근로자 세부 정보 홈페이지 입력

-기업별 가상계좌 부여 및 기업에서 일괄 입금 (근로자 분담금 및 기업지원금)

4월 전용 온라인몰 오픈 및 참여근로자 여행적립금(40만원) 사용(~2020. 2월)

*전용 온라인몰: 숙박, 체험/입장권, 패키지,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
(세부내용 홈페이지 vacation.visitkorea.or.kr 참조)

참여신청

신청기간 2019. 2. 12(화) ~ 3. 8(금) **25일간**

신청방법 **기업 단위 온라인(PC) 신청** > 홈페이지 vacation.visitkorea.or.kr

제출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참여신청서

신청문의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 내 FAQ 참조

전담 지원센터 ☎1670-1330 ✉vacation@knto.or.kr

참여혜택

참여근로자

-휴가비(국내여행경비), 전용 휴양소, 상품 할인, 특별이벤트 제공 등

전체 참여기업

-사업 참여증서 제공 및 참여기업 홍보

-정부인증(가족친화인증제, 여가친화인증제) 신청시 가점 부여

우수 참여기업 > 정부포상, 언론홍보, 차년도 우선선정 등

참고사항

- 근로자 참여 조건(소득수준 등)은 없음 (단, 기업 대표자는 참여불가)
- 참여신청은 기업 단위로만 가능하며, 근로자 개인 신청은 불가
- 여행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
- 참여 혜택 세부내용은 일부 변동 가능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 vacation.visitkorea.or.kr 전담지원센터 | 1670-1330

구제역 방역 , 정부 · 지자체 · 농업인의 협력이 중요한 때
 - 고강도 방역 태세 유지, 지자체 간부진 현장 점검 강화 등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금일 개최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상황점검 영상회의」에서, “이번 구제역 확산 차단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장의 현장점검과 지속적인 관심”임을 강조하며,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특별 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특별 관리 대책은 ①각 기관별 단체장이 직접 주재하는 방역회의 개최, ②간부진으로 점검반 구성 · 운영, ③거점소독시설과 도축장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이 포함되도록 하되, 지자체별로 가축사육 현황 및 축산시설 규모 등 현장특성을 고려하여 관리대책을 마련 ·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이번 이 장관의 지시는 “8일째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어 자칫 일선 공무원들의 긴장이 완화되고, 현재와 같은 고강도의 방역이 지속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 금일 영상회의에는 구제역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 방역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민간전문가: 정현규 前양돈수의사회장

○ 정현규 회장은 “백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려면 1주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앞으로 소독 등 관리가 중요하며, 백신이 누락된 개체가 없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농가는 보완접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이 장관은 전국 지자체장에게 “2월 18일부터 시작되는 구제역 백신 접종 항체 검사 이전에 긴급 백신접종이 누락된 개체나 농가가 없는 지 다시 한 번 철저히 확인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오늘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전국 도축장, 축산농장 등에 대하여 대대적인 소독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 과거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이 미흡했던 농가 등을 중심으로 생석회 33톤(1,645포)을 추가로 공급·도포하여 생석회 차단벨트를 구축하기로 했다.

○ 또한, 드론 69대를 투입하여 가축 밀집사육단지 67개소 등의 장소에 대하여 상공에서 소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드론 69대, 광역방제기 124대(지자체 29, 농기계사업소 25, 들녘경영체 30, 농협 40), 과수원용 고압 문부기(SS기) 131대 등 소독차량·장비 총 1,386대

□ 농식품부 방역 관계자는 “오늘부터 주말까지 낮은 기온이 예보되고 있으므로 ‘구제역 방역 겨울철 소독요령’에 따라 철저히 소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물산업 중심으로 도약...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계획 발표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올해 7월 운영 개시를 앞두고 있는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이하 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 환경공단은 지난해 7월 환경부로부터 물산업클러스터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후 현재 물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운영준비단을 구성하여 물산업클러스터 조성공사 및 본격적인 운영 준비를 하고 있다.
- 물산업클러스터는 국내 물산업의 진흥과 물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기술성능확인, 실적확보, 사업화에 이르는 전(全)주기를 지원하는 국가기반시설이다.
- 환경부에서 국비 2,409 억 원을 투자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일대에 부지 14만 5,209m² 규모로 구축 중에 있으며, 6월 완공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공정률 94%)가 진행 중이다.
- 환경공단은 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물산업의 중심'을 이상향(비전)으로 설정하고, △ 신규 일자리 1.5만개 △ 세계최고(글로벌 톱) 신기술 개발 10개 △ 해외수출 7,000억 원을 운영 목표로 추진한다.

※ 고용유발계수 클러스터 입주 6.85명/10억, 집적단지 입주 10.5명/10억 적용(한국은행)

- 이에 맞춰 환경공단은 현재 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준비단 조직을 올해 상반기 조직 개편에 맞춰 이사장 직속의 물산업클러스터 운영단으로 편제해 운영할 예정이다.
- 운영단은 올해 1단, 3실, 9개 실행팀, 82명으로 2023년까지 중장기 계획에 따라 4센터 1캠퍼스 18개팀, 138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환경공단은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기업 입주율 향상을 위해 기업 유치 상담(컨설팅)단을 구성하고, 분기별로 설명회를 연다.
- 이를 통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우선구매, 사업화 지원으로 성공본보기(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물산업 기술 수요조사로 연구과제 발굴과 제안에도 참여한다.
- 지속적인 시험기반 시설 마련을 위해 196억 원을 투입해 먹는 물, 하·폐수 등 검사장비 169종, 331대의 구매, 배치를 완료하고, 국내 시험기반이 부족한 펌프, 파이프등 대형장비의 유체성능시험센터 실시설계도 추진한다.
- 물기업은 물산업클러스터 실증화시설, 진흥시설 및 기업지원 과정(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다양한 분야의 물기업이 집적되어 기업간 공동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통한 동반상승(시너지) 효과 창출 및 매출 향상이 예상된다.

○ 하루 2천 톤 규모의 정수를 처리하는 등 실증시설 시험이 가능해져
신기술 개발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개발이 가능하다.

※ 정수(2,000m³/일), 하수(1,000m³/일), 폐수(1,000m³/일), 재이용(1,000m³/일) 실증시설 구축

○ 실험분석실 내의 물 관련 전 분야 실험, 재료실험, 고도화 실험
장비까지 구축되어 제품 및 기술의 성능확인도 빨라진다.

※ 먹는물 수질검사(일반, 수처리제, 바이러스, 원생동물), 하·폐수 수질검사,
위생안전검사, 환경측정기기 검사, 표준재료시험 검사 장비 구축

○ 물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지원, 해결하기 위한 과정(프로그램)으로
물 관련 분야의 기술자문 뿐만 아니라 금융, 세무, 회계 등 경영
분야 전문가의 상담(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로 컨설팅단 구성 운영

○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전시회, 박람회 등에 공동 홍보관을
운영하고,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견학 과정(프로그램) 등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 해외협력단을 구성하여 해외홍보 및 사업연계 지원

○ 물기업 수요에 기반한 취업연계 및 현장기반 실습·이론 병행
교육으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인재 공급, 혁신형 물기술 인력
확보가 가능해진다.

※ 물기술 전문가에 특화된 교육실시 및 해외진출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 물산업클러스터는 지역 고용 창출, 기업 공생 발전, 물산업 기술혁신

중심축(허브) 조성 및 관련 산업발전으로 대구지역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 물관련 산학협력 활성화 및 물산업 역량 활용으로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과 지역균형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물산업클러스터는 우리 물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며, “물기업도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물산업클러스터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맞벌이 가구를 위한 거점형 공공 어린이집 확대

- 자치단체 대상 공모 실시, 2019년 총 10개소 건립 추진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등 저소득·맞벌이 가구의 보육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란 국가(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세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의 보육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 거주지 또는 교통 요지에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을 말함

- 작년 강서구, 계룡시, 시흥시 3개 지역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10개 소로 확대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50개소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18) 3개 → ('19) 10개 → ('20) 10개 → ('21) 13개 → ('22) 14개 추가

- 올해 1월부터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공모를 시작하였으며, 공모에 대한 자치단체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2월에 6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6일에 걸쳐 각 권역별 지방고용노동청에서 개최, 공모 일정·신청방법 등 안내

- 공모 신청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할 수 있으며, 1차 사전 서류심사, 2차 「건립지역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 선정 심사에서는 2018년도에 실시한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①중소기업 노동자 밀집, ②보육수요 충족률, ③이용 편리한 주거지 인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건립지역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 신청서는 오는 3월 15일(금)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하며, 신청서류와 서식 등은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을 통해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건강한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 “고용노동부는 2022년까지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50개소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국가 정책에 발맞춰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 붙임 1.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권역별 설명회 개요
2.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공모 공고문
3. 직장어린이집 현황('18년 12월말 기준)

- (목적)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 사업'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이해를 높이고, 수요 파악 및 컨설팅 수행으로 공모 참여 활성화 도모
- (설명회 개요)
 - (일시) 2018.2.11.(월) ~ 2018.2.18.(화), 13:00~14:00
 - (장소) 6개 권역별 지방고용노동청
 - (참석대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육담당 공무원
 - (주요내용)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의 개념과 사업 개요
 - 서울 강서구 등 시범사업 추진 사례
 - 공모 일정 및 신청방법 안내
 - 주요 Q&A 설명 및 질의응답

권역별 설명회 일정

권역	일시		장소
경기/인천/강원	'19.2.11(월)	13:00~14:0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청)대회의실
서울	'19.2.12(화)	13:00~14: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컨벤션룸
부산/경남	'19.2.13(수)	13:00~14:0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센터)대회의실
대구/경북	'19.2.14(목)	13:00~14:0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청)대회의실
광주/전라/제주	'19.2.15(금)	13:00~14:0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청)대회의실
대전/충청	'19.2.18(월)	13:00~14:0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대회의실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등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보육 지원을 위하여 매칭으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건립할 기초자치단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명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 사업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개요

- (목적)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등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보육 지원
- (개념)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 거주지 등에 설치·운영하는 공동 직장어린이집
- (유형)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3호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인가 주체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입소순위)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우선 지원

기존 직장어린이집과의 비교

구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공공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재원 (’19 예산)	고용보험기금 (280억원, 설치비)	고용보험기금 (72억원, 운영비)	고용보험기금 (1,275억원, 설치·운영비)
설치 주체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와 해당 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지원대상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中 중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자녀 우선 입소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 자녀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위치	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 거주지 또는 교통 요지 등	근로여성 밀집지역 (거주지, 산단 인근 등)	주로 직장 內
개수	’19년 10개소(’18년 3개소)	24개소(’96~’03)	1,111개소(’18.12월)

□ 사업내용

- (사업규모)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총 10개소 건립
- (사업방식)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매칭
 - 사업비 매칭비율 : 고용보험기금(근로복지공단) 80% + 자치단체 20%
 - ※ 건립분담비용에는 부지·건물매입비, 설계·감리·공사비, 교재교구비 등 포함
- (사업예산) 280억(근로복지공단 출연사업)
 - ※ 사업비 산출내역 : 50억×국고보조율 80%×10개소×연차별진도율 70%
- (건립유형) ① 신축(부지매입) 또는 ② 시설전환(건물매입)
- (건립규모) 개소당 보육아동 정원 150명
 - 해당 자치단체의 보육수요, 부지·건물매입비 등을 고려하여 보육아동 정원 조정 가능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주체 :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와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매칭 하는 경우 공동으로 공모신청 가능 (신청서는 기초자치단체명으로 작성·신청)

□ 신청기간 : 2019.1.21.(월)~2019.3.15.(금)

※ 접수 상황에 따라 기일 변경 및 추가 공모 가능

□ 신청방법 : 우편송부 또는 방문접수

- (접수처)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
 - 문의 : ☎ 052-704-7355, 7360
- (제출서류) 공모 신청서 및 공모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3. 심사·선정

□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접수서류 사전검토 후 건립지역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심사
 - (구성) 건립지역 선정위원회는 보육·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
 - (방식) 심사는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최종 심의를 통하여 선정
- (선정기준) 건립지역 부지확보 및 추진계획, 예산조달계획의 적정성, 지역 보육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건립지역 적정성) 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 또는 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여부
 - (건립계획 적정성) 부지확보 가능성 및 시설규모, 설치유형, 소요비용 등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부지매입·착공·개원 등 추진 일정의 효율성
 - (예산조달계획 적정성) 예산확보 계획 및 시기·가능성 정도,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계획 등
 - (지역 보육수요 대응성) 보육충족률, 공공어린이집 보급률, 3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수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 결과 반영
 -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역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육아정책연구소, '18년)
 - (필요성 등) 산업기반,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한 건립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정도와 지역 민간어린이집에 미치는 영향 등

□ 결과통지 : 2019년 4월 (심사과정, 추진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심사결과 미달된 사업은 추후 별도 추가공모 가능(별도 문의)

4. 기타 참고사항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권역별 설명회 실시 : 2019.2.11.(월)~2.18(월) (※예정으로 변동시 추후 안내)

권역	일시		장소
경기/인천/강원	'19.2.11(월)	13:00~14:0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청)대회의실
서울	'19.2.12(화)	13:00~14: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컨벤션룸
부산/경남	'19.2.13(수)	13:00~14:0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센터)대회의실
대구/경북	'19.2.14(목)	13:00~14:0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청)대회의실
광주/전라/제주	'19.2.15(금)	13:00~14:0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청)대회의실
대전/충청	'19.2.18(월)	13:00~14:0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대회의실

* 설명회장은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052-704-7355, 7360)

붙임4

직장어린이집 현황(2018년 12월말 기준)

□ 전체 어린이집 현황

- '18.12월 기준 직장어린이집은 총 1,111개소(국가·지자체 등 431, 민간기업 680)로, 전체 어린이집의 2.8%, 보육아동의 4.4% 수준

전체 어린이집 현황('18.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명, %)

구분		계	국공립	직장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등	부모 협동	민간	가정
기관수	개소(A)	39,171	3,602	1,111	1,377	748	164	13,518	18,651
	(비율)	100	9.2	2.8	3.5	1.9	0.4	34.5	47.6
아동수	현원(C)	1,415,742	200,783	62,631	92,787	41,298	4,360	711,209	302,674
	(비율)	100	14.2	4.4	6.6	2.9	0.3	50.2	21.4

※ 기존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유형에 해당함

□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총계 (A+B)	공공(A)					기업(B)			형태			
	소계	거점형	국가	지자체	학교· 대학병원	소계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기업	소계	거점형	단독	공동 (중소기업)
1,135	456	25	240	137	54	679	123	556	1,135	25	889	221(47)

※ 기존 공공직장어린이집 24개와 강서구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거점형으로 분류하였음

□ 민간 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세부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계	대기업		중소기업				
		단독	공동	단독	공동			
					소계	일반공동	컨소시엄	산단형
어린이집	680	431	126	38	85	38	3	44
사업장수	3,119	431	810	38	1,840	411	24	1,405
아동수	35,897	21,918	9,058	868	4,053	1,763	77	2,213
교직원수	10,083	6,214	2,493	294	1,082	501	28	553

전국 87개 여성친화도시 “마을 단위 성평등 정책” 추진한다.

- '2018년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시상식 및 협약식' 개최 -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마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한 정책을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가 올해 전국 87개소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 여성친화도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일자리, 돌봄 및 안전 정책을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초 지자체를 여성가족부가 심사하여 여성친화도시로 지정

↳ ('09) 2개 → ('10) 10개 → ('11) 30개 → ('12) 39개 → ('13) 50개 → ('14) 57개 → ('15) 66개 → ('16) 76개 → ('17) 86개 → ('18) 87개

- 여성가족부는 1월 31일(목) 오후 2시 포스트타워(서울 중구 명동 소재)에서 신규 지정된 3개 지자체와 재지정된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지난해 우수기관 3곳*에 대해서 시상한다.

* 광주 북구(대통령표창), 경기 고양시·대전 대덕구(국무총리표창)

- 신규 지정된 지자체는 경기 의왕시, 충남 서천군, 전남 나주시로 3개이며, 여성친화도시 지정 후 5년이 지난 강원 원주시, 경기 광명시, 경북 구미시 등 9개 지자체도 그간의 성과와 새로운 추진계획을 인정받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됐다.

구 분	지자체 명
신규지정 (3)	경기 의왕시, 충남 서천군, 전남 나주시
재지정 (9)	강원 원주시, 경기 광명시·용인시, 경북 구미시·경산시, 대전 서구, 부산 남구, 전북 남원시, 충남 보령시

□ 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들은 다양한 ‘생활밀착형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 의왕시는 여성 범죄예방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강화하고, 서천군은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을 외국어 해설사로 양성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나주시는 혁신도시 조성으로 다양한 성평등 정책 수요가 나타남에 따라 자체 개발한 성별 통계에 기반하여 맞춤형 여성 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신규 지정도시의 주요 추진 사업 >

		
경기 의왕시 (여성 범죄예방 기반시설 구축)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여성일자리 창출)	전남 나주시 (나주시 여성(성별)통계 개발)

□ 한편, 여성친화도시 우수 기관으로 광주 북구가 대통령 표창을, 경기 고양시와 대전 대덕구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 **광주 북구**(‘11년 지정, ‘16년 재지정)는 동(洞)·아파트 단위로 특색 있는 여성친화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여성친화 특화마을’을 운영하여 여성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및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 **경기 고양시**(‘14년 지정)는 여성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등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청사 내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여성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한 성과가 있었으며, **고양여성역사 콘텐츠를 개발하여 성평등한 역사 인식을 확산시킨 노력**이 인정됐다.
- **대전 대덕구**(‘15년 지정)는 육아 돌봄방, 소모임이 가능한 창작실, 북카페 등으로 구성된 ‘대덕마더센터’를 조성하고, 지역의 여성리더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안전한 지역 조성 등을 주제로 강의·토론을 진행하는 **대덕여성리더십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여성의 역량강화에 힘썼다.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친화도시’는 지자체 공무원을 비롯하여 기업과 지역 주민이 손을 맞잡고 성평등한 일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이라고 평가하고,

- “여성가족부는 지역주민들의 일상에 성평등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며, 인적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도 여성친화도시에 합류할 수 있도록 지역양성평등센터 및 전문가 등과 연계하여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여성친화도시 정부포상 시상식 및 협약식 개요
2.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문

□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19.1.31.(목), 14:00~15:25,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명동)
- 참석자 : 약 200여명
 - 여성친화도시 조성 유공 정부포상 자치단체장, 신규·재지정도시 자치단체장, 담당공무원,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 회원, 시민참여단 등
- 주요 내용
 - 정부포상 수여, 협약서 서명 및 현판 증정, 자치단체장 발표 등

< 2018년 정부포상 및 신규지정·재지정 여성친화도시 >

- ▶ 정부포상(3) : 광주 북구(대통령 표창), 경기 고양시·대전 대덕구(국무총리표창)
- ▶ 신규지정(3) : 경기 의왕시, 충남 서천군, 전남 나주시
- ▶ 재지정(9) : 강원 원주시, 경기 광명시·용인시, 경북 구미시·경산시, 대전 서구, 부산 남구, 전북 남원시, 충남 보령시

□ **행사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14:00~14:02 (02')	■ 개회 및 국민의례
14:02~14:05 (03')	■ 참석자 소개
14:05~14:10 (05')	■ 인사말씀 (여성가족부장관)
14:10~14:15 (05')	■ 여성친화도시 우수기관 시상식
14:15~15:10 (55')	■ 지정도시 협약서 서명 및 교환
15:10~15:25 (15')	■ 지자체별 단체사진 촬영
15:25~	■ 폐 회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서

여성가족부와 ○○○는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지역사회 조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 양 기관의
업무 협력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행정 단위를 말한다.

제3조(목표) 양 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이념을 바탕
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과 남성이 동
등하게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협력내용) 양 기관은 협약의 구체적 추진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1.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성평등 정책 사업 공동 발굴 추진

2. 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3.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와 교육

제5조(지정의 철회)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노력과 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거나 여성친화도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제6조(효력) 본 협약서는 양 기관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양 기관의 대표자가 바뀔 경우에도 이 협약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2019년 1월 31일

<p>여 성 가 족 부 장 관 진 선 미</p> <p>_____</p>	<p>○ ○ 시(군, 구) 시장(군수, 구청장) ○○○</p> <p>_____</p>
---	---

국토부, 지자체별 저상버스 보급 계획...375.5 억 투입

- 전국 17개 시·도 통보...전년 대비(802대) 9.5% 확대된 877대 보급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저상버스*의 '19년 지자체별 보급 계획을 확정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한다.

* 저상버스: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승·하차가 용이한 버스

○ 올해에는 전년(802대) 보다 **9.5% 확대된 877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저상버스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전년도 340억 원에서 **10% 증가된 375.5억 원**으로 확대한다.

* 저상버스와 일반(고상)버스 가격의 차액(약 0.9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50%(서울은 국가 40%, 서울시 60%)씩 매칭하여 보조

□ 금년부터 저상버스 보급률 확대를 위해 전기·수소버스 등 친환경 버스 공급정책과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 전기·수소 저상버스를 구매 시 환경부의 친환경 보조금(1억원)과 함께 저상버스 보조금(0.9억원)을 지원(총 1.9억원)

○ 특히, 전기·수소버스 등 범정부 친환경 버스 공급정책에 맞추어 전기·수소 저상버스 수요(354대)를 우선 배정하였고, CNG·디젤 버스는 나머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별 수요 및 집행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였다.

《'19년 저상버스 지자체별 배분내역》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877	299	88	57	27	29	11	5	14	199	5	20	21	6	8	9	59	20
CNG/디젤	523	224	43	39	12	11	11	2	10	120	-	5	1	5	7	9	24	-
전기/수소	354	75	45	18	15	18	-	3	4	79	5	15	20	1	1	-	35	20

- **환경부 친환경 정책*과 연계하여 전기·수소 등 친환경 버스를 저상버스로 보급하면, 저상버스 보급률이 '18년 기준 25%(추정치) 수준에서 '22년에는 약 4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발표('18.12.18,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따르면 '22년까지 전기·수소버스 5,000대 보급(전기버스 3,000대, 수소버스 2,000대)

-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하고 저상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 기존 저상버스를 차량 도래, 고장 등에 따라 대.폐차 시 저상 버스로만 교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 저상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에도 도입할 수 있는 중형크기 저상버스도 내년부터 공급을 추진한다.
- 또한, 저상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휠체어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시설 보완 방안,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버스정류장 개선, 운전사 대상의 서비스교육 강화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박정수 과장은 “앞으로 전기·수소버스 공급 확대 정책과 연계하여 저상버스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며,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저상버스 이용률을 제고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아 휠체어 이용자, 고령자 등의 승. 하차가 용이한 저상버스 도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 (보조금) 국가지자체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함(교통약자법 제14조제4항)

*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와의 차액(약 92백만원)을 지자체와 매칭(서울 40%, 기타 시·도 50%)으로 운송사업자에게 보조

□ **시·도별 도입 현황**

- **2017년** (단위: 대,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내대수	33,796	7,134	2,517	1,521	2,324	1,041	1,016	741	184	10,138	659	537	791	976	736	1,444	1,647	390
저상대수	7,579	3,110	528	473	374	200	245	93	45	1,344	189	119	57	171	80	149	334	68
도입률	22.4	43.6	21.0	31.1	16.1	19.2	24.1	12.6	24.5	13.3	28.7	22.2	7.2	17.5	10.9	10.3	20.3	17.4

- **2018년(추정치)** (단위: 대, %)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내대수	31,889	7,405	2,517	1,521	2,362	1,041	1,016	747	275	8,229	563	585	870	829	704	1,150	1,686	389
저상대수	8,059	3,291	563	600	400	213	279	96	54	1,365	189	127	61	182	87	165	319	68
도입률	25.3	44.4	22.4	39.4	16.9	20.5	27.5	12.9	19.6	16.6	33.6	21.7	7.0	22.0	12.4	14.3	18.9	17.5

안전관리 취약선박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한다

- 대형사고 예방에 해사안전 지도·감독 역량 집중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올해 해사안전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대형 해양사고 예방 및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 선박의 무리한 운항금지 ▲ 복원성 확보 ▲ 화재예방이라는 안전수칙에 따라 선종별 중점관리 분야를 설정하였다. 또한, 해사안전분야 전문가인 해사안전감독관을 통해 3,243회의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선종	중점관리 분야
연안 여객선	노후여객선(20년 초과) 기관관리 실태, 여객선 승선절차·신분증 확인 등 기본안전수칙 이행상태
내항 화물선	카페리선박, 예·부선 및 기타선박의 운항사고 방지, 위험물운반선 화재·폭발사고 방지
원양어선	선체상태, 법정 승무정원 및 안전설비 관련규정 준수 상태

특히, 안전관리에 취약한 선박과 해사안전감독관을 상호 연계하여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선박소유자나 선사경영자가 안전 지도·감독 현장에 참석하여 선박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인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해사안전감독관의 지도·감독 역량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의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지방청 간 교차감독을 활성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3대 선박안전 기본수칙에 입각한 엄격한 안전 관리 감독으로 대형 선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작년 한 해 동안 선박 2,358척 등 총 3,214회에 걸쳐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 추진방향 >

◆ 목 표 : 총 3,243회 지도.감독 실시

◆ 주요 추진방향

- 취약선박.선사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 역량 향상 지원
- 대형사고 방지에 정책 역량 집중
- 해사안전감독관의 업무능력 제고

□ 감독대상과의 긴밀한 지원체계 구축 및 선박소유자 현장 참여제도 도입

- 감독관이 선박.사업장의 자체 안전관리체제를 심도 있게 파악하여 필요한 권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호 매칭 프로그램 도입
 - 선사경영자(또는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안전관리 실태와 미흡사항을 직접 인지.개선할 수 있도록 감독관의 선박 방선 시 참여

□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취약분야 집중 점검

선종	중점관리 분야
연안 여객선	노후여객선(20년 초과) 기관관리 실태, 여객선 승선절차·신분증 확인 등 기본안전수칙 이행상태
내항 화물선	카페리선박, 예·부선 및 기타선박의 운항사고 방지, 위험물운반선 화재·폭발사고 방지
원양어선	선체상태, 법정 승무정원 및 안전설비 관련규정 준수 상태

□ 해사안전감독관 업무능력 제고

- 해사안전감독관이 전문적.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규임용~근무기간(5년) 동안의 매년도 교육 커리큘럼 개발 추진
 - 감독관의 전문성 및 업무 공유를 위한 교차감독 활성화 및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지도·감독 >



< 안전설비 시연 >